

네트워크회의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워크숍

불평등에 맞서야 기후위기도 맞설 수 있다

정록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장]

2020년 6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발표하고 9월에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10월에 정부는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한다. 2021년에는 ‘탄소 중립 녹색성장법’ 제정과 ‘2050 탄소 중립위원회’ 출범,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발표가 이어졌다. 이제 방송과 신문을 비롯한 주류 언론에서도 ‘기후위기’를 주요 이슈로 다루기 시작한 지 꽤 됐다. 기업 광고의 상당수는 ‘그린’을 앞세운 금융,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대기업들의 탄소 중립, 친환경 경영에 대한 장밋빛 포부들이다. 어느 날 갑자기 ‘기후위기’, ‘탄소 중립’이 모두가 동의하고 함께 하는 사회적 인식이자 가치처럼 되었다. 윤석열 정부도 탄소 중립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탄소 중립, 기후위기를 내세우며 ‘원전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결국, 기후위기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온실가스 대규모 배출의 원인이 무엇인지, 빠른 에너지 전환과 배출 제로를 위한 적절한 방안이 무엇인지, 산업전환 과정에서의 책임과 부담을 누가 질 것인지 등을 둘러싼 정치가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사회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기후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불평등과 정의’의 문제이다. 그런데 어떤 ‘불평등’에 주목하고, 무엇을 ‘기후 정의’라고 볼 것인지부터가 첨예한 문제이다. 흔히 신자유주의 이후 심화 된 사회 불평등과 화석연료로 인한 기후위기라는 자연재해 상황이 결합 된 것으로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이해한다. 하지만 사회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 즉 자본주의가 기후위기를 초래했다고 본다면 불평등 해소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책이 될 것이다.

지난 25년 동안 전 세계 탄소배출을 주도한 상위 10%(6억 3천만 명)의 ‘개인적 소비’를 통제한다고 해도 탄소 감축에는 한계가 있다. 이들이 주도한 탄소배출의 상당 부분은 주식과 채권의 형태로 기업에 투자된 자산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개인적 소비를 줄이고 막대한 탄소세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감당할 소득은 엄청난 탄소를 뿜어대며 이윤추적과 성장을 멈추는 순간 작동 불능에 빠지는 초국적 자본으로부터 나온다. 이제 기후위기는 더이상 ‘환경/생태’ 문제가 아니며 자본주의 성장체제, 생산과 소비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자본주의 성장체제가 작동 가능한 구조인 자본주의 권력 관계, 즉 생산수단(기계/토지/자원)의 사적 소유에 따른 배타적/독점적 전유 권리에 맞서지 못한 채 이뤄지는 기후운동의 ‘대안’ 모색은 자본주의가 깔아놓은 판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를 야기한 구조와 제도, 권력의 문제를 직시하지 않는 책임, 피해, 비용의 분배는 권력 관계의 종속변수일 뿐이다. 이러한 권력 관계의 변화 없이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이라는 종말론적 증상뿐이다. 자본주의 권력 관계에 맞서는 기후 정의 운동은 먼저 자본주의 자체를 공적인 투쟁, 협상, 논의, 개입의 대상으로 올려놓기 위한 ‘사회운동’이어야 한다. 투쟁과 협상의 의제 설정 자체를 바꿔내는 사회적 힘이 되어야 한다.